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지방자치제가 30여년만에 부활되어 시·군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선출되었다.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지방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장」이 열렸다는, 자기 지방의 여러가지 살림 살이를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뽑은 대표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등등, 여러가지 기대와 희망 속에 기초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 나타

난 45%의 기권자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여당성 당선자들이 대다수인 데, 이는 지방행정기관과의 담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각 지역의 돈 뜯개나 있고, 행세개나 하는 사람들이 당선자의 다수인 데, 이는 자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권개입이 주민 전체의 이익 보호 보다 앞서지 않겠는가.

정당공천과 정당의 선거운동 개입금지 등 정당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인들이 당선자의 대부분인데, 이는 기초회의원의직을 중앙정치로 뛰어 들기 위한 교두보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본인을 지방정치의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등, 걱정어

린 여론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이다.〉

이번에 당선된 시·군 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군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자일 뿐만 아니라, 견제자로서 기능을 성실히 수행 함으로서 시·군행정기관들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4년간이다.

시·군 의회 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살림살이는 모두 해당된다. 이런

**시·군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군 행  
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자일뿐 아니라,  
감시자로서 시·군 행정기  
관들이 그 지역주민을 위  
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  
구해야 한다.**

과제를 위해 일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세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연간 60일간의 회기일 동안, 하루에 3만원 정도의 회의 수당만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의 살림을 다루는 국회의원들과는 신분상은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예컨대, 국회의원과는 달리,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을 뿐 아니라, 신분상 별다른 특혜도 보장되지 않는다.

요컨대, 시·군 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굳은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그 직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분들에 의해 지역살림이 감시되고 감독되어서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다면 그런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과정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또한 성공적으로 발전되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발전이 나아가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고 또하나의 「정치공해」와

폐해만 일으켜,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기초의회 의원들 각자의 마음 가짐과 각오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농업구조의 재편성과 지방의회 구성〉

이번에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총4,303명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등 대도시와 부천, 안양, 성남, 안산, 과천 등 사실상 서울이면서 농업과 거의 무관한 공업지역의 의원수가 대략 1,800여명에 이른다. 직업별 분포로는 농민이 전체 의원수의 약 28%인 1,200여명에 달하지만, 사실상 위의 공업 중심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2,500여명의 의원 중 1,200여명이 농민으로서 약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이 농민 출신 의원들의

비중이 지방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 아니라, 그 성패여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지방도시들은 거의 농촌을 끼고 있어서 농업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도시의 의회가 활성화되는가 하는 점도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농업, 농민과 직접관련이 적은 대도시 의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초의회와 그 의원들은 농업과 직접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도시 의원을 제외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농업과 농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농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익히 잘 아는 데로, 우리 농업은 우루파이 라운드와 농어촌 발전종합대책(같은 목표와 구도가 축산발전장기대책으로 축산분야에 적용됨)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 UR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한국의 농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재편성의 논리는 캐케묵은 19세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비교생산비설, 비교우위론, 국제(가격)경쟁력 강화, 생산성·효율성증대, 기술개발, 수출 농업화, 이들

을 위한 규모확대 등의 논리로 농업을 공격하면서 재편성할려 한다. 이는 대자본의 농촌침투와, 농업지배로 귀결한다. 이것들에 의한 식량공장의 건설이 의도될 것이다. 따라서 농민, 농부에 의한 농업은 이제 사라질 지도 모른다.

결국, UR농어촌발전종합대책(축산발전장기대책)은 농업해체를 촉진하고 있다. 이같은 농업해체 촉진을 통한 농업재편성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살림을 꾸려갈 의회구성을 하게 되었다.

즉, 농촌지역의 정치구조가 재편성 되었다. 농촌지역에서 경제구조의 재편성이 농업재편성(=UR, 농발대)이라면, 정치구조의 재편성이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 목표〉

이같은 상황 속에서 시행되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목표는 자명하리라 보여진다. 몇가지 바라는 바를 적어본다.

첫째, 농민 출신 의원들은 농업재건을 통해 지역발전, 국가



**농민출신 의원들은 농업재건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현재 농민들은 부채농화, 소작농화, 탈농, 이농의 길을 걷고 있고 농촌은 「자연경로당」, 「자연양로원」이 되었다.**



발전에 이바지하자.

돌이켜 보면, 오늘날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이 모습이 된 것은 도시중심(특히 서울중심), 공업중심, 수출중심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되지 않고, 자본이 농업에 침투하므로써 농업이 해체되어서, 농업의 화학화, 기계화, 토양의 산성화, 환경파괴, 식품의 안전성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농민들은 부채농화, 소작농화, 탈농, 이농화의 길을 걷고, 농촌은 「자연 경노당」, 「자연 양로원」이 되었다.

이 모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극복하려면, 빈사상태의 농업을 재건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농업재건·농업발전이 되어야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오늘날의 농업위기는 서울(=중앙)중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는 철저히

탈 중앙중심이 되어야 하고, 탈 정당, 탈 정치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중앙중심이 아니라 지역중심, 중앙정당, 정치중심이 아니라, 농민중심, 농업중심으로 활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 문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自治)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중앙정부, 중앙정당, 중앙정치로 부터의 지시와 명령이 농민의 이익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 지역 농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自治)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 의원들은, 농민들의 부락회의나, 여러가지 회합에도 자주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청회를 종종 개최하기도 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농업재건, 농업발전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미에서 「자치제」는 정착되고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농민들의 이익에 기초하지 않은 「자치」는 중앙으로부터 지역 농민 통제의 새로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작목에 관계 없이 농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어야 한다.

원래 농업은 경종작물이건, 축산이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것인데, 농업내에 자본이 침투하므로서 이런 상호의존적, 보완적 관계가 파괴되었다. 이것이 농업해체이다. 농업이 해체되면, 자본이 농업내에 침투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서로 분리되고 흩어져서 각자의 이익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 경쟁력도 떨어진다.

축산의 경우, 생산비 구성을 보라. 사료, 종축, 동물약품, 기자재 비용이 생산비의 얼마를 차지 하는가? 이 비목들은 농업의 기술개발과 관계없는 전부 자본(=공업)측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농업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자본(공업)측의 비용이 낮아져야 한다, 이런 현상들은 농업내부의 상호의존성, 보완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성, 보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공업)측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자본측의 농업공격(=농업

해체, 재편성)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치」)농업내부의 상호의존성·보완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민간의 「협동과 연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데, 축산농민은 수도작농민의 문제인 쌀값인상, 추곡수매제도 등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만약, 쌀값이 낮아져서 수도작 농민이 소득증대를 위해 닭이나 돼지를 전국적으로 기르게 되면 축산농가도 모두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사태를 맞게된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수도작농가 다같이 함께 잘사는 길은 쌀값이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작농민이 축산으로 몰리지 않으므로 함께 잘 살 수 있게된다. 농민 내부의 「협동과 연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려면, 각 작목별 조직이 농민들 스스로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농민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있게될 뿐 아니라, 결국 돈뿐이 있는 지역 유지만이 의원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게

된다. 또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채,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만 아주 높고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도시, 중앙」으로부터의 현실적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유혹에 빠진다면, 지방의 「농민자치」는 무너져 내리게 되고, 중앙에의 종속의 새로운 길을 열게되며, 그리하면 농업재건도 허망해질 수 있다. 따라서 농업재건을 통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재정이 자립되면, 기초의회의원에게도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 〈조급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농민자치」라는 막 땅위로 올라온 곡식의 떡잎을 보고 있다.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아니, 빨리 자라게 할려고 살짝 뽑아 놓으면, 키가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말라 죽어버릴 수 있다. 어쨌든, 「농민자치」의 성패에 오늘날 농업위기의 활로가 달려있다고 해도 좋다. 따라서, 앞으로 4년간 농민들을 위해 고생할 의원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자. 44